

육아정책 소식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교육부는 7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수립 경과

- 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수용함.
- ②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마련됨.
- ③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함.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주요 내용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함.

- ①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
- ②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됨.
- ③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함.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7.14.)'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함.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되었다.

〈2학기 늘봄학교 선정 현황〉

구분	기존 교육청					추가 선정 교육청			계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부산	충북	충남	
1학기 학교 수(개교)	30	20	80	43	41				214
2학기 학교 수(개교)	30	20	154	50	41	50	42	72	459
증가분(개교)	-	-	+74	+7	-	+50	+42	+72	+245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 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때와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돌봄대기 해소, 지자체 협력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법 집행 개선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토) 합의하였다.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 발표

교육부는 9월 13일(수),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올해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한 「우선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 -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 -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 -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

구분	내용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 -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 -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이해제고 및 교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 -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 -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 -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
협력기반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차 실무협의회를 운영 - 시도교육청·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 -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대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 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보건복지부는 7월 5일(수)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주요 안건은 ①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② 임신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③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④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1.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임신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3.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위기 임신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교육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위해 힘 모으다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②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③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 또한,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효율적인 기관 수급 및 영유아 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의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지자체-시도교육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8일(화)에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법령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8월 8일(화)부터 8월 10일(목)까지 3일간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주제로 「2023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 과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아동대표(10세~17세, 100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이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으로 진행되는 첫 전국단위 아동총회로서, 8월 8일(화)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에서 개회식을 진행한 후, '아이코리아 연수원(서울 송파구)'으로 자리를 옮겨 3일간의 열띤 토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되어 각 부처가 소관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지난해,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채택된 결의문 13건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 수용 여부 및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택된 결의문 모두에 대해 수용(일부수용 포함) 의견이었다.

대한민국 아동정책 심의·조정기구인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 참여를 요청한 건에 대해, 지난 4월 13일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총회 제13기 아동대표였던 박찬미 위원(現 아동총회 TF 위원)을 신규 임명하기도 했다.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 항 채택

보건복지부는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14개 항의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전국의 아동대표(10~17세) 100명은 지난 8월 8일(화)부터 8월 10일(목)까지 3일간 14개 조로 나누어 조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별 의제를 각각 결의문으로 발전시켰다.

올해 채택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 ②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 ③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

- ④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
- ⑤ 예·체능 교육 강화
- ⑥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 등

전국 아동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20기 의장단의 제주 신성여자중학교 1학년 김세은 의장과 충북 미덕중학교 3학년 윤석중 부의장은 8월 10일(목)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결의문 내용을 전달해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차기 '아동정책조정 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 안건으로 상정·보고하고, 이후,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식에서 결의문에 대한 각 부처의 최종 이행 결과를 아동대표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목)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 하였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및 다누리 누리집에 게시되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전문 통역사의 동시 통역을 지원받아 희망하는 언어로 답변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가족행복의 든든한 버팀목,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는 10일(월)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실시 결과, 경북 경산시(최우수 기관) 등 총 35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227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은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와의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지원 및 아동 안전사고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서비스기관을 도시, 도농, 농촌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아이돌보미 활동, 서비스 제공, 예산집행, 서비스 점검(모니터링) 사후조치 등 업무 전반을 다루었다.

전체 최우수 기관인 경북 경산시 서비스기관은 이용자 만족도, 아이돌보미 활동률, 이용가정 증가율, 예산집행의 충실성, 지속적 서비스 점검(모니터링) 환류 등 대부분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지역 1위 우수기관인 부산 북구 서비스기관은 이용가정의 요청사항을 빠르고 정확히 파악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사자들의 역량이 돋보였다.

도농지역 1위 우수기관인 충남 공주시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율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아동의 발달단계 및 기질적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수교육에도 힘썼다.

농촌지역 1위 우수기관인 경남 거창군 서비스기관은 이용자 만족도 외에도, 소속 아이돌보미의 사명감과 자부심 등 직무만족도 제고에 각별히 노력하여 현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하였다.

우수기관의 운영사례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개선자문(컨설팅)을 통해 널리 확산할 예정이며, 10월 개최되는 전국 ‘아이돌봄지원사업 소통의 날’ 행사에서 우수기관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참석자들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올바른 부모역할, 가족센터와 함께 해요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 달 간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여름방학을 맞아, 놀이 체험을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토요일은 아빠가 좋아(서울 강동)’, 올바른 스마트폰 습관·사용법을 함께 배우는 ‘우리가족 스마트폰 부탁해(충북 서산)’, 체육활동을 통해 자녀 신체발달과 양육방법을 알아가는 ‘엄마아빠 함께 체육(대전 서구)’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족센터는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간 관계증진을 위한 가족유형별(핵가족,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상담, 아동 양육방법 교육, 성장기 청소년 자녀 대화법 길잡이(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온라인 영상교육을 지원하였다.

취약·위기 가족의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4일(금)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 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개선('24)〉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1자녀		2자녀 이상	
				0~5세	6~12세		
㉔형	75% 이하	85%	75%	85%	75%	본인부담금10%추가지원	
㉕형	120% 이하	60%	20%	60%	30%		
㉖형	150% 이하	15%	15%	20%	15%		
㉗형	150% 초과	-	-	-	-	-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현행('23)〉 정부지원 0~1세	〈개선('24)〉 정부지원 0~1세
(가형) 75% 이하	90%	90%
(나형) 120% 이하	60%	
(다형) 150% 이하	15%	
(라형) 150% 초과	0%	
		0%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월) 오전 10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 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아빠 교실 운영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 향상, 양성 평등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교실' 등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과정별 1→2회, '23.7~9월)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22년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성별 맞춤형 특화 과정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 뿐 아니라,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2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은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아빠교실」은 전문가 특강과 함께 육아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놀이 실습과 선배 아빠와의 대화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일&육아 힐링교실」은 육아휴직 예정·복귀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원활한 조직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육아 전문가 상담·강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 내 여성 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리더와의 소통·공감」은 일·생활 균형, 조직 내 역할 및 업무 노하우 등 여성리더의 경험을 공유·전수하는 시간으로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에는 부처 내 여성인력 유입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과정별 연 2회 확대·추진할 예정이다.